

러·중관계와 새로운 한·러관계의 모색*

장 덕 준 | 국민대학교

1990년대 중반부터 러·중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국 사이에 협력, 경쟁, 갈등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한 양국 관계의 복잡성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역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추구했다. 러시아는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요시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이러한 분쟁해결과 방지문제를 다자주의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중의 협력에 기대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러·중의 협력/갈등 요소를 잘 활용해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획득과 시베리아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러협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남북한, 러시아,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4각 경협’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러관계, 러·중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6자회담, 4각 경제협력, 국가이익

I. 머리말

지난 2008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를 선언하고 양국관계의 발전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외면적으로는 한·러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 처럼 보이지만 양국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어떤 분석가들은 정치 및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반면, 경제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문제 등 한반도 이

*이 논문은 2011년도 국민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슈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신범식 2010; 이재영 2010). 한편, 한·러관계에서 한국 측이 행한 역할에 대한 러시아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그리 후한 편이 아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주로 자원공급처로 간주하면서 투자와 경제협력 부분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Бульчев 2000; Toloraya 2010). 또한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한·러 협력이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Жебин 2010). 이와 같이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러시아가 발전시켜 온 협력관계는 성과와 함께 다소간의 미흡한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러관계의 복합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러 양국관계에 대한 기존연구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기존의 한·러관계에 대한 연구는 양국의 쌍무 협력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양국관계의 역사를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현안들을 분석한 다음, 발전 전략과 전망을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재남 2010; 한종만 2010; Селезнева 2010). 이들 연구들은 주로 정치외교, 경제, 문화 등 한·러관계의 특정한 영역들을 다룬다. 대체로 이들 분석들은 한·러 양국이 발전시켜 온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향후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 각국의 상대국에 대한 정책들에 관한 분석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한국 또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전략과 국가이익 등을 분석한 다음, 각국의 상대국에 대한 정책의 현황과 그것이 해당국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상옥 2000; 윤익중 2003; Син 2004; 홍완석 2005; Bauer 2009). 이 가운데서 러시아의 대 한반도/한국 정책을 다룬 저작들이 한국의 대 러시아 정책을 분석한 연구보다는 월등히 많은 편이다. 셋째,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한·러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눈에 띈다. 예컨대 미중관계와 러시아에 대한 연구라든지, 러·중관계와 미국 등 미중러 3각 관계의 축에 기초한 연구들이 존재한다(Dittmer 1992; 김덕중 2002; 고재남 2011). 또한, 동북아 국제관계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루는 문헌 또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도 나와 있다(최태강 2004; 홍완석 2011).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최근 수년간 협력의 범위와 밀도를 더해 온 러시아와 중국 양국관계의 맥락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강화는 한반도와 한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러관계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을 러·중관계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은 2007년 이래 수년간 정체상태를 보여 왔다. 더구나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 3대 세습을 위한 정치작업을 벌이는 동안에 남한에 대한 국지도 받을 감행해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강한 입김을 행사해왔다. 한편으로 러·중 양국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력의 폭을 넓혀 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유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양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이나 양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한·러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무수한 변수 가운데서도 러·중관계의 특성과 변화,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함에 있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과연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한 러·중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러·중관계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한·러관계를 위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러시아가 발전시켜 온 협력관계에 기초해서 한·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한·러 양국의 쌍무적인 현안 분석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동북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강대국의 위상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한·러 협력의 중요성과 발전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러 양국의 협력관계의 발전을 전망해 보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한·러 양국의 대외정책상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그들간의 상호 유사성과 접점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이어서 러·중관계의 현황과 그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러·중관계의 특징들에 근거해서 한·러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전략들을 살펴볼 것이다.

II. 한·러 양국의 대외정책 목표와 전략

러·중관계의 양상과 그것이 한반도와 한·러관계에 끼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기 전에 한·러 협력관계의 가능성과 그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양국 대외정책의 목표와 그 전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주요 아젠

다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관계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 도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및 지역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국가이익 및 대외전략을 간략히 살펴보자. 한국의 대외정책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한국은 국제협력의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안보, 경제협력, 기타 국제이슈영역에 있어서 의제를 주도, 촉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Cooper 1997; 김치욱 2009, 15). 예컨대 한국은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라든가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형성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경제대국으로서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빈곤문제 해결, 민주주의 증진, 환경보호, 국제테러와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등 글로벌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성숙한 글로벌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한다(대한민국 정부 2008).

둘째, 한국은 한반도 주변의 4강에 대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한국정부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 때 어색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강화시켜 21세기의 환경변화에 걸맞은 전략동맹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한국정부는 일본과 한일 신시대 구상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은 기존의 미국, 일본과의 협력 이외에도 러시아 및 중국과의 북방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방외교를 강화시키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무역, 투자 등 경제교류를 심화시키는 한편, 자원 에너지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8년에 서울은 모스크바, 베이징과 각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라는 가치를 내세워 외교의 지평 확대를 도모해 왔다. 이는 지금까지 4강외교에 치우쳐 있던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실리 외교의 전략으로 볼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 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넷째,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통한 민족의 번영을 궁극적인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가

국가이익 가운데 소위 ‘존망의 이익’(survival interest) 또는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에 해당된다고 하겠다.¹⁾ 이러한 국가이익의 실현을 위해, 한국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 및 개방과 남북한 통합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평화로운 남북한 통일을 지향한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한국은 글로벌 차원, 동북아 지역,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 소위 “복합적 중층의 외교안보 구조” 속에서 각각의 수준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외교를 추구했다(조윤영 2008; 홍현익 2008).

‘중견국가’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대국’의 위상을 갖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경제적 부흥과 함께 지구적 강대국으로 재등장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전략과 목표를 살펴 보자. 현재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은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7월에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 2008년 8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천명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요원칙>, 그리고 2009년 5월에 채택된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 2020> 등에 나타나 있다. 이들 문건들에 반영되어 있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본 노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특정 국가에 의한 일극적 지배는 세계정치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지구화 시대의 국가간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다극적 질서의 구축을 지향한다. 이는 미국의 독주체제가 글로벌 정치무대의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대외정책의 정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다층적이고 다방면(multi-vector)적인 외교와 안보정책을 추구한다.

둘째, 러시아는 핵무기 강대국으로서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해 핵확산 방지를 중요한 대외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안정이라는 이슈영역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옛 소련 시기부터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전략무기의 제한 또는 감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정상회담과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의 제한과 감축을 위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방지에도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전통적 안보영역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리즘, 해적행위를 포함한 국제범죄의 방지,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 방지, 경제 및 금융

1) ‘존망의 이익’과 ‘핵심적 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구영록(1995, 31-36) 참조.

안보, 정보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부문에서도 스스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몇몇 중요한 지역에 대해 외교역량을 집중해 왔다. 우선, 18세기 초 이래 유럽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대상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에도 러시아는 유럽연합 및 유럽 각국과의 에너지, 경제 및 안보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전통적인 영향력의 범위에 속하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의 결속을 다지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에서의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1992년에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창설했다. 그리고 2000년 10월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간에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가 결성되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3개국을 포함하는 단일경제공동체(CIS)가 출범할 예정이다.

넷째, 러시아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취임 2년차인 2009년 5월에 ‘러시아 경제현대화 및 기술발전을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출범시켜 에너지, 핵기술, 의료기술, 우주항공 및 통신분야 등 5개 산업부문에 있어서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대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메드베데프는 실리콘밸리를 본떠 모스크바 근교도시인 스콜코보에 첨단 기술단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러시아 국내외의 IT, 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과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Kopinski 2011).

한편으로, 근년에 들어와 러시아 대외정책에 있어서 동북아는 유럽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Лукин 2010). 동북아와 한반도에 있어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러시아는 국경지대의 안정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따라서 모스크바는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지대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은 물론 분쟁에 대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남북한 무력분쟁과 긴장고조 상황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쏟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이익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는 스스로 주요 강대국으로 간주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특정 국가에 의한

독주가 아닌 다극적인 질서에 의해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러시아의 시각에서 한반도는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지대이다.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옛 소련 때부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 안보체제를 창설할 것을 주창해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북핵 6자회담에 러시아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셋째, 러시아는 동북아 근린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국가프로젝트를 수립해 놓고 있다.²⁾ 이를 위해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자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또한 한국은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 지역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출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함으로써 자국이 아태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거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안정과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을 선호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러 양국의 외교적 목표와 전략은 큰 차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양국의 이익 사이에는 상당한 접점과 교집합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 수준에서의 정치·안보적인 협력의 필요성이다. 한국에 있어서 북한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소위 ‘존망의 이익’에 해당한다(구영록 1995, 65-67). 러시아의 경우에도 국경지대인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역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이익’으로 간주한다(홍완석 2005, 630). 보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오랫동안 옹호해 오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세안 지역협력포럼(ARF),

2) 예를 들면, 2007년 3월에 발표된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발전전략 개념(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Концепция)’ 및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 및 사회발전 2013’ 등이 그것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이후엔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새로운 발전 법안이 제안되었다. 그 명칭은 ‘극동 및 바이칼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 2025(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이다(<http://www.minpromtorg.gov.ru/docs/projects/0190> 검색일: 2011. 3. 20).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등 지역협력기구에 가입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으로서 그러한 역내 다자협력 틀 속에서 안보 및 경제 부문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분야는 에너지 협력과 교통 및 물류부문의 협력이다(Bauer 2009, 52-62).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는 유럽에 편중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Sevastyanov 2008). 또한, 한국은 중동에 치우친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의 자원외교를 중요한 외교전략으로 삼고 있다. 2011년 8월 24일의 북·러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킴은 물론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또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입장이다(Trenin 2005 443-452). 이처럼, 경제협력 부문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다. 대테러, 해적소탕 등 국제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해양오염 방지를 포함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글로벌 빈곤퇴치, 국제 보건, 핵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사용 문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핵에너지의 안전성 문제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등장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관해 한국과 러시아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양국 간에 협력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여지가 있다.

III. 러·중 협력관계와 한반도

앞서도 지적했듯이 한·러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과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접근법과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제 최근 들어 상호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러·중관계의 현황과 그것이 한반도 문제와 어떠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1. 러·중협력 관계의 전개

최근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은 2001년 7월 장쩌민-푸틴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어도 외교적 수사에서는 양국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양국은 2006년 ‘중국에서 러시아의 해,’ 그리고 2007년에는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를 선언하고 여러 차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협력관계를 밀도 있게 발전시켜 왔다.

양국의 협력관계는 이러한 외교적 수사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되었다. 첫째, 양국은 4,000km가 넘는 국경선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 극동 러시아 지방에서 일부 비판도 있었으나,³⁾ 2008년 7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외무장관은 베이징에서 아무르강의 불쇼이 우수리스크 섬(중국명 헤이샤쯔다오)의 절반을 중국의 영유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러·중 동쪽 국경선 서술 협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국경선을 최종 확정했다(『중앙일보』2008/07/23).

둘째, 양국은 무기교역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2000년대 초반 항공기, 구축함, 잠수함 등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무기의 규모는 연간 10억~15억 달러에 달했다(Deng 2007, 872). 무기교역은 비단 상업적인 거래의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 안보에도 영향을 끼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무기교역의 증대 또한 양국 간 협력의 진전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물론 러시아의 보수적인 인사들은 중국에 대한 첨단무기의 수출이 러시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산 무기의 대 중국 수출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진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Ryan 2010, 185).

셋째, 러시아와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통한 다자안보 부문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진전시켜왔다. SCO는 원래의 목표를 확대해 정치, 경제, 운송, 교육, 문화, 환경보호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SCO의 주도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은 SCO를 통해 긴밀한 안보 협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러·중 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3) 아무르강 삼각주 섬들을 중국측에 인도하려던 러시아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지방 차원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와시타 교수의 저작을 참고(Iwashita 2004, 76-79).

는 차원에서 SCO를 다자 안보협력기구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러·중 양국은 ‘평화사명(Peace Mission)’ 등의 이름으로 SCO의 주관 하에 여러 차례의 합동군사훈련을 벌인 바 있다.

넷째, 양국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먼저, 교역부문을 살펴보면, 소련 붕괴 직후 수년간 러시아 국내의 혼란과 경제침체 현상으로 말미암아 양국 간 교역량은 1990년대 후반까지 상당한 감소를 기록했다. 그 이후 양국 간 외교적 협력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도 급등해 2002년의 교역량은 72억 4,200만 달러에 달해 1999년의 44억 6,1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97.3%나 증가했다. 2009년 현재 양국의 교역량은 약 59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양국 간 투자는 교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러·중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를 보면,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대 중국 직접투자(1억 2,600달러)가 중국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7,730만 달러)보다 더 많았으나, 2005년부터는 그 양상이 역전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러 직접투자액은 4억 5,200만 달러인데 비해 러시아의 대 중국 직접투자액은 오히려 6,700만 달러에 그쳤다(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0).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협력분야이다. 세계 굴지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량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러시아와 세계의 공장으로서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목말라 있는 중국 사이에 에너지 협력이 양국 협력의 중요 아젠다가 된 것은 당연하다.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산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 정부와 8년간의 오랜 협상 끝에 2009년에 타이세트에서 스코보로디노를 거쳐 다칭까지 연결되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지선 건설에 합의를 이끌어 내고, 2010년 말에 마침내 그 완공을 보았다. 그리하여 중국은 일일 수송량 30만 배럴에 이르는 동시베리아산 원유를 향후 20년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Downs 20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러·중관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 온 결과, 작금의 양국관계는 역사상 최고조에 도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협력관계의 공고화에도 분야에 따라서는 양국 간에 상당한 이견이나 경쟁, 더 나아가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러시아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수사를 거듭 사용해 왔으나, 내심으로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해 우려와 경계의 시선을 갖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급성장은 러시아인들에게 도전, 위협, 또는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Voskressenski 2007, 35).

둘째, 양국 협력의 중요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는 SCO의 기능과 목표에 대해서도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의 경우에는 SCO가 기본적으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의 경우 SCO를 경제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엄구호 2011).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영향력의 범위를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 지역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 등 제3의 세력이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SCO가 다자 안보기구의 역할에 치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로서는 SCO를 통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포함해 광범위한 영역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셋째, 일견 양국 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동시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호혜적인 분야로 손꼽히는 경제협력과 에너지 협력 부문에서도 양국 간에는 상호 불신과 경쟁, 더 나아가 갈등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또한, 양국 간 교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무기교역에 있어서도 첨단무기 기술의 이전을 둘러싸고 러·중 양국 사이에는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국 간 교역의 규모는 상당히 늘어났으나, 러시아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⁴⁾ 에너지 협력 문제에 있어서도 러·중 사이에는 상호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의 에너지 협력을 꺼려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러시아의 불투명하고 변덕스러운 정책결정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Downs 2010, 160-163). 2000년대 중반에 벌어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노선 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양국이 벌이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과의 석유 및 천연가스 확보경쟁은 향후 이 지역에서의 양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넷째, 양국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상인, 기업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러시아 유입이 늘어나면서 양국 간에 불신과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도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유입이 늘어나면서 중국 위협론으로 번져 소위 '황화론'

4) 예컨대 2006년 3월 중국 방문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가운데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중국 측에 다양한 러시아 상품을 구매할 것을 촉구했다(Xinhua Financial Network News, March 23, 2006).

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상당수 러시아 주민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자국 유입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그러한 주민들의 인식을 빌미로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주에 대한 규제정책을 추구해왔다(Lotspeich 2010, 131).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과장된 담론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러시아인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다소간 이견과 경쟁구도가 발견된다(Wishnick 2010, 66).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급성장하는 국력을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정치 무대에서 자국의 국력에 걸맞은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는 국가이다(Voskressenski 2007, 37). 중국의 급성장과 동북아 역내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중국의 경제적 팽창이 자국의 산업을 잠식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러시아는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의 다른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Rozman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결과 오늘날 양국관계는 역사상 최고로 우호적인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양국관계는 결코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상태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러·중관계의 현상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결국에는 동맹관계의 수준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Levin 2008; 박창희 2006). 유사한 맥락에서 러·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에서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호혜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양국의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실용주의적인 낙관을 펼치는 견해도 있다(Voskressenski 2007). 그러나 양국관계는 공통의 가치나 장기적인 상호이익, 그리고 대등한 국력 등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적 행보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포함해 중단기적인 이해관계의 공통분모에 기반을 둔, '편의에 의한 결합축(axis of convenience)'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Lo 2008; Deng 2007).

2. 러·중관계와 한반도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해 공통된 이해관계와 함께 상이한 입장도 동시

에 지니고 있다. 양국의 한반도 정책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공통된 목표와 이익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과 무력도발, 북한의 체제변화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양국 간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한다. 첫째,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이다. 러·중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의 원칙 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하지만, 러·중양국은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방법과 강조점에서 다소간 차이점을 노정해왔다. 우선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의 1차 북한 핵위기 때 자국이 그 해결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자협의 체에 반드시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영향력 구축을 도모해왔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을 동북아의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⁵⁾ 반면, 중국은 1990년대 이래 동북아 역내에서 급속히 확대된 자국의 위상과 북한에 대한 자국의 확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 다지고,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효과를 추구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스스로 '6자회담 의장국'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에서 전략적 이익을 지키고,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자신의 위상을 유지 또는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Economy 2010).

둘째, 최근에 일어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의 입장에서도 유사한 측면과 함께 다소간 견해의 차이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우선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자. 먼저, 러시아는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6월초에 자체 조사단을 파견해 일주일여 걸쳐 조사활동을 펼쳤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이 한국정부에 의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책임소재에 대해 모호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앞서 2010년 6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지정한 성명서가 채택될 때 러시아는 제동을 걸지 않음으로써 중국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전략적

5) 그 결과, 2007년 2월 13일 북핵 6자회담 제5차 회의 3단계 협상에서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항구적인 평화레짐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13 합의에서 제안된 5개의 실무그룹 가운데 러시아는 “동북아 공동 평화 및 안보 메커니즘 실무그룹”의 책임을 맡기로 했다(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ix-party_talks 검색일: 2011. 7. 21).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했음은 물론,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하지도 않음으로써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중국은 드러내 놓고 북한을 비호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중국은 천안함 진상조사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을 피해나갔다.⁶⁾ 베이징은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 거둬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 대신 중국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동북아의 긴장국면이 조성되곤 한·미·일 결속이 더욱 강화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조속히 6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에 발생했던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회피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그 자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양국이 일정한 차별성을 드러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도발을 적시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서도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 등 동북아의 안보문제에서 자신의 몫을 찾겠다는 전략적 목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보다는 관련 당사국들의 자제와 신중한 대처를 촉구하면서 또 다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했다. 중국정부 내부에서는 향후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입해 나가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홍규 2011). 종합해 보면,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북·중관계 발전의 선결조건으로 강조해오던 종전의 정책 대신 이제는 이 두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정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을 시사한다(Lim 2010). 이와 같은 중국의 공세적인 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대해 러시아는 러·중 협력과 공조의 레토릭을 지속하면서도 역내에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견제와 균형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6) 2010년 5월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엄중한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된 정세를 점차적으로 완화시키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중국은 원치 않으며 남북한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 당초 중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YTN, 2010년 5월 30일, http://www.ytn.co.kr/_In/0101_201005301937570113 검색일: 2011. 7. 21).

셋째,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해 양국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체제안정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3국에 의해 취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압력이나 제재 조치 또는 간섭 - 중국도 포함 - 에도 반대한다. 국경지대 안정을 우선하는 러시아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이나 급격한 체제변동을 원치 않는다. 만약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격한 체제변화가 일어날 경우 많은 북한의 난민이 러시아 영토에 유입되는 등 러시아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Blank 2010).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여 점진적인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제3국이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거나 평양에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이 군사·지리적 완충지대(buffer zone)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중국으로서는 김정일 정권의 현상유지를 원한다. 더 나아가 김정일 사후에도 북한에 안정적인 친중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중국으로서는 3대에 걸친 북한권력의 세습을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넷째, 한국과의 쌍무적, 다자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러·중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각각 한국과 단독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3대 수입국이자 5대 수출국으로써 2009년 기준으로 교역규모 1,4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양국의 경제협력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러 교역은 한·중교역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양국의 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 18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본적으로 러·중 각국의 한국에 대한 쌍무적 경제협력은 독자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잠재적인 경쟁 또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예컨대, 2000년 무렵부터 한·러 간에 꾸준히 논의되어온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은 TKR과 중국횡단철도(TCR)의 연결을 통한 유럽철도와의 연결 프로젝트와 경합을 벌일 수도 있는 사안이다. 또한, 러시아가 중장기 국가프로젝트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사업을 두고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로서는 에너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동북아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경쟁 내지 잠재적인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양국은 나진·선봉 특구 개발 등 북한의 연착륙을 돕고,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자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

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

IV. 러·중관계의 맥락에서 본 한·러관계의 발전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의 틀 속에서 양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에 있어서 공조와 협력의 기초를 유지해야 한다는 수사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로 정책조율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위상이 급상승하고,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위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함에 따라 러시아는 우려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있어서의 역학구도의 변화와 러·중관계의 미묘한 입장 차이에 주목해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러·중관계의 구도 속에서 한·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미·중간의 갈등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도발방지를 위해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한편으로 한반도의 안정이 자신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러시아는 북한에 의한 도발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재도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반응해 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그러한 도발행위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비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한반도 존재감 유지를 원하는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조치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는 2010년에 발생했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서 그러한 전략의 일단을 드러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의 글로벌 외교의 목표와 전략, 그리고 한반도 정책의 속성을 잘 활용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러시아의 적절한 역할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한·러 차관급 이상 안보관련 고위 당국자 간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갖는 등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접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핵강대국으로서 핵확산 방지를 원하는 러시아로 하여금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위해 북한 핵개발 방지와 핵폐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한 방법으로서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원하는 러시아로 하여금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대어 6자회담을 진전시키도록 한국은 모스크바로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확산방지 차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 모스크바로 하여금 에너지 협력 등을 내세워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2010년에 약 150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의 교역량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타결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FTA를 이미 논의 중인 한·중 FTA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한국과 러·중 간의 실질 협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원의 다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러시아와의 자원 협력의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에너지, 농업, 교통·물류 등 소위 3대 신실크로드 개척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꾸준히 심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을 통한 교통 및 물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메드베데프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현대화 프로젝트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한·러협력에 있어서도 러·중관계의 특성을 예의주시함으로써 한·러관계의 증진은 물론, 한국의 국가이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중 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측은 에너지 수출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자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 한편, 러시아가 일본과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러·중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4각 경제협력'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이미 러시아는 푸틴 집권 초기부터 남북한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소위 '3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온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창춘-지린-투먼을 연결하는 개발프로젝트인 소위 '창·지·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만주의 공업지대를 육성하는 동

시에 동해로의 출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윤경우 2011). 한국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잘 활용해 이 프로젝트를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연결함으로써 남북한-러시아-중국이 참여하는 '4각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당사국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북한 체제를 안정시키고, 폐쇄적인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보다 성숙한 한·러 협력관계는 양국의 쌍무적인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양국은 다양한 다자협력기구를 통한 호혜적인 협력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러시아는 UN과 같은 전통적인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APEC, G20, ASEM, ASEAN 등 지역적, 범지구적 협력체를 통해서도 공동번영과 인류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해왔다. 이러한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와 협력의 분위기는 향후 동북아 지역 내에서 러시아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다자안보기구의 창설에 한국도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핵 6자 회담을 항구적인 역내 집단안보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러시아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 또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그러한 구상에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는 만큼 한국과 러시아의 공조는 그러한 다자협력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역내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이러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이슈 영역에서 러·중과의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수년 전부터 유라시아 국가들과 관련된 안보 및 경제문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다자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한국은 북방외교의 거점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로 확대함으로써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세력에 편중되어 왔던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중장기적으로는 상하이협력기구의 업저버 국가로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엄구호 2011). 한편, 한·러 양국은 환경보호, 국제테러리즘 방지, 해적, 마약밀매, 사이버 범죄 등의 초국가적 범죄행위 대처, 에너지 및 식량안보, 금융안보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정보와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서 상호협력을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러관계를 보다 더 심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동북아 지역 내

에서의 지정학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벌써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중 간 이견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 한편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전략적 연대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경쟁 또는 갈등 요소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면서 동북아 지역 내의 주도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내심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중국경제의 팽창으로 인해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한국 등 여타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증대를 도모할 개연성이 크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북핵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한국도 협력의 범위를 조율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베이징 및 모스크바와의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해 보다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점차 남북한 통일을 위한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은 중·러 협력관계 및 경쟁(갈등)관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V. 맺음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4대 강대국과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자원외교의 중요한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와의 협력에는 비단 쌍무적인 협력이슈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온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양대 대륙세력의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중 양국은 미국의 일극지배에 대한 반대를 공유하면서 군사·안보, 경제, 에너지, 그리고 다자협력기구를 통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범위를 넓혀왔다. 특히 북한문제와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양국의 그러한 협력관계는 상호불신과 경쟁 그리고 잠재적·실재적 갈등과 뒤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러·중관계의 그러한 복잡성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 한·러관계를 보다 유연하면서도 호혜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러·중의 협력을 활용해 미국 및 일본의 입장과 외교적 조율을 기함은 물론 북한에 대한 외교적 설득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북한에 공급하는 프로젝트, 중국의 창·지·투 개발프로젝트와 북한의 나진·선봉 특구개발에 남북한 및 러·중이 함께 참여하는 소위 '4각 경제협력' 프로젝트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러·중 에너지 협력과 경제협력에 내재해 있는 양국의 잠재적 갈등 요소들을 한국이 활용함으로써 한·러 경제협력 및 에너지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연방정부가 현대화 프로젝트와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부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러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지정학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북방정책이 시급하다.

투고일: 2011년 7월 1일

심사일: 2011년 8월 3일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15일

참고문헌

- 고재남. 2010. "한·러 정치·외교 관계 20년: 평가 및 향후 과제." 『슬라브학보』 25권 4호, 417-445.
- _____. 2011. "러·중 관계의 발전과 미국 요인." 『외교안보연구』 7권 1호, 109-138.
- 구영록. 1991. "국가이익과 한국의 대외정책." 『국제정치논총』 31집, 11-35.
- _____. 1995.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치 현실과 이상』. 서울: 법문사.
- 김덕중. 2002. 『미중관계와 러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안보협력으로』. 서울: 태학사.
- 김치욱. 2009.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과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49집 1호, 7-36.
- 김흥규. 2011. "2011년 제11기 4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내용과 함의." 『안보현안분석』 57(3월), 대한민국 정부. 2008. 『이명박 정부 10대 국정과제』, 서울: 대한민국정부.

- 박창희. 2006. “유라시아 지정학 변화와 중러관계: 기원과 발전, 그리고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 12권 3호, 73-102.
- 신범식. 2010.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이익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26권 1호, 235-278.
- 엄구호. 2011. “SCO에서의 러·중협력: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 7권 1호, 37-71.
- 윤경우. 2011. “만주의 동해출구를 열어야.” 『월간중앙』 8월호.
- 윤익중. 2003. “옐친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와 러시아 외교의 성격고찰.” 『국제정치논총』 43집 3호, 455-475.
- 이상욱. 2000. “21세기 한국의 대 중국과 러시아 외교정책의 방향.” 『지방자치연구』 8집, 91-112.
- 이재영. 2010. “한-러 경제협력 20년의 평가와 전략적 협력방향.” 제22차 한-러 국제학술회의 발표. 서울. 9월.
- 조윤영. 2008.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50호, 189-222.
- 최태강. 2004. 『러시아와 동북아: 1990년대 초 이후 러시아의 대 중·일·한·북 외교』. 서울: 오름.
- 홍완석. 2005. “푸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 홍완석 편. 『현대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603-651. 파주: 도서출판 한울.
- _____. 2011. “동북아 다자안보: 러시아의 정책과 한·러 협력.” 『슬라브연구』 27권 2호, 31-62.
- 홍현익. 2008.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 4월.
- Bauer, John W. 2009. “Unlocking Russian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Parameters* 39. No. 2 (Summer), 52-62.
- Bellacqua, James, ed. *The Future of China-Russia Relations*.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Blank, Stephen. 2010. “Russia and the Six-Party Proces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 on *Tomorrow's Northeast Asia*, organized by Korean Economic Institute, October 20-22.
- Cooper, Andrew, ed. 1997.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Mcmillan Press.
- Deng, Yong. 2007. “Remolding Great Power Politics: China’s Strategic Partnerships with Russia, the European Union, and Indi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0. No. 4-5 (August-October), 863-903.
- Dittmer, Lowell. 1992. *Sino-Soviet Normalization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1945-1990*.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Downs, Erica S. 2010. "Sino-Russian Energy Relations: An Uncertain Courtship." In Bellacqua (2010), 146-175.
- Economy, Elizabeth C. 2010. "The Game Changer: Coping with China's Foreign Policy Revolution." *Foreign Affairs* 89. No. 6 (November-December), 142-153.
- Iwashita, Akihiro. 2004. *A 4,000 Kilometer Journey Along the Sino-Russian Border* [21st Century COE Program Slavic Eurasian Studies No. 3] Sapporo: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 Kopinski, Mark. 2011. "Russia's Push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Modernization." *American Century Investment Blog* (<http://americancenturyblog.com/2011/01/russia%E2%80%99s-push-for-economic-diversification-and-modernization/> 검색일: 2011. 3. 27).
- Levin, Michael L. 2008. *The Next Great Clash: China and Russia vs. the United States*. Westport, CT: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 Lim, Soo-Ho. 2010. "China-North Korea Relations and Rajin-Sonbong Special Economic Zone." *SERI Quarterly* 3. No. 3, 123-127.
- Lo, Bobo. 2008.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London: Chatham House.
- Lotspeich, Richard. 2010. "Economic Integration of China and Russia in the Post-Soviet Era." In Bellacqua (2010), 83-145.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0. *2010 China Statistical Yearbook*. Beijing: China Statistics Press.
- Rozman, Gilbert. 2010. "The Sino-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How Close? Where To?" In Bellacqua (2010), 13-32.
- Ryan, Kevin. 2010. "Russo-Chinese Defense Relations: The View From Moscow." In Bellacqua (2010), 179-202.
- Sevastyanov, Sergey. 2008. "The More Assertive Pragmatic New Energy Policy in Putin's Russia: Security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East Asia* 25, 35-55.
- The Kremlin. 2004. "Press Statement Following Russian-Korean Talks," Moscow, The Kremlin, September 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mid.ru/Brp_4.nsf/arh/15CC87DDDC84303C3256F17002D31C8?OpenDocument 검색일: 2011. 3. 11).
- Trenin, Dmitri. 2005. "Putin's 'New Course' is Now Firmly Set: What Next?" In Andrei Melville and Tatiana Shakleina eds. *Russian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Concepts and Realities*,

- 443-452. Budapest, Hungary: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 Voskressenski, Alexei D. 2007. "The Rise of China and Russo-Chinese Relations in the New Global Politics of Eastern Asia." In Iwashita Akihiro ed. *Eager Eyes Fixed on Eurasia [Vol. 2]: Russia and Its Eastern Edge*, 3-46. Sapporo: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 Wishnick, Elizabeth. 2010. "Why a Strategic Partnership?: The View From China." In Bellacqua (2010), 56-80.
- Булычев, Г. 2000. "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попытка схематизации."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стока*, № 2, 32-41.
- Жебин, А. З. 2010. "Построение новой системы мира и в С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РФ и РК." paper presented at the 22nd Korea-Russia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September 30~October 1.
- Лукин, Артем. 2010.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том 8, № 2 (Май-август) (<http://www.intertrends.ru/twenty-second/008.htm> 검색일: 2011. 2. 17).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7.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http://www.minpromtorg.gov.ru/docs/projects/0190> 검색일: 2011. 3. 20).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9.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Утвержде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2 мая 2009 г. № 537 (<http://www.scrf.gov.ru/documents/99.html> 검색일: 2011. 2. 15).
- Селезнева, Е.Л. 2010.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результаты и возможности."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ditions and Tasks of Russo-Korean Strategic Partnership: Viewpoints from the Russian Side,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ctober 7.
- Син, Бом Сик. 2004.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 время 2-о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правлен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е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슬라브학보』 19권 2호, 675-710.
- Чубарьян, А. О. 2003. "Основные этап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А. В. Торкунов, ред., *Десять лет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Материалы первого конв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26-31. Москва: РОССНЭН.

ABSTRACT

A New Korea-Russia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Russia-China Relations

Duckjoon Chang | Kookmin University

Russia and China have managed to develop a “strategic relationship” since the mid-1990s. In reality, however, in th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re intertwined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Such a complicated nature of Russo-Chinese relationship is also the case in th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for instance, demanded that the six-party talks should be immediately resumed notwithstanding North Korea’s provocations including the Cheonan incident. By doing so, Beijing seemed to help the North to preserve its regime stability, while claiming its own influence in Northeast Asia. Russia also prefers stability of the North, while it is quite much interested in a multilateral approach to deal with North Korea’s adventurism. Given such characteristics of Russo-Chinese relations, South Korea has to cooperate with Russia and China for the purpose of discouraging Pyongyang’s nuclear program and its provocative actions. Meanwhile, by utilizing conflicts/cooperation between Moscow and Beijing, Seoul should find out a niche place for securing energy resources, try to secure investments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region, and seek for the opportunities for “Four-party Economic Cooperation” among North and South Korea, Russia, and China.

Keywords: Korea-Russia Relations, Russia-China Relations, Strategic Partnership, Six-party Talks, Four-party Economic Cooperation, National Interest